

주간 통일정세

2017-40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군사
3. 경제
4. 사회문화
5.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9.30	北 김정은, 이번엔 농장 시찰...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연합뉴스)
	10.2	제21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막(연합뉴스)
	10.4	유엔주재 北대사 “제재 불법·부당...더 큰 용기 불러올 뿐”(연합뉴스)
	10.5	北, 분야별 과학기술 발표회 잇따라 열어(연합뉴스)
	10.6	北, ‘개성공단 의류공장 가동설’에 “공장 더 힘차게 돌아갈 것”(연합뉴스)
	10.8	北,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김정은 “병진노선 변함없이 나가야”(연합뉴스)
		北 최룡해·김여정·최휘 약진... 김정은 당’으로 몰갈이(연합뉴스)
		北,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20주년 대규모 경축대회(연합뉴스)
	10.9	확 바뀐 北 주석단...최룡해 뜨고, 김기남·최태복 지고(연합뉴스)
	10.10	北, 당 창건일에 “병진 기치 들고 반미 최후승리 앞당기자”(연합뉴스)
	10.12	北 외무상 “핵무기 대상 협상 동의 못해...美와 힘 균형 거의 도달”(연합뉴스)
		北 신문 “핵무력 완성 목표달성 똑똑히 보게 될 것”(연합뉴스)
		유엔주재 北 대사 “경제봉쇄 최대 피해자는 어린이” 강변(연합뉴스)
10.13	北 김정은, 만경대혁명학원 방문...“핵심공간 키워내”(연합뉴스)	
군사	10.10	北 특수전부대, 패러글라이더로 한미연합사 침투훈련(연합뉴스)
경제	10.3	RFA “北, 개성공단 내 의류공장 은밀하게 가동”(연합뉴스)
사회 문화	10.2	러 통신업체, 北인터넷 서비스개시...“北, ‘접촉차단’ 대응 쉬워져”(연합뉴스)
	10.5	“北, 평양 1주일 비우는 주민 구속...무허가 주류 판매시 추방”(연합뉴스)
	10.10	北, 당 창건일 축제 분위기 조성...각지서 공연·무도회(연합뉴스)
외교 국방	9.30	北 아태평화위, 트럼프 대통령 원색 비난(연합뉴스)
		北 “러시아와 회담서 한반도 정세 심도 있는 의견교환”(연합뉴스)
	10.1	틸러슨, 美北 직접접촉 첫 확인...‘뉴욕채널’ 등 재가동하나(연합뉴스)
		이탈리아도 北대사 추방...스페인 이어 유럽서 2번째(연합뉴스)
	10.2	北 “美 초강도 제재, 효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연합뉴스)
	10.3	백악관, ‘대북 대화론’ 거듭 일축 “지금은 대화할 시간 아니다”(연합뉴스)
	10.5	푸틴 “2001년 방북 때 김정일이 원자탄 보유 밝혀...이제 수소탄”(연합뉴스)
10.6	북, 유엔총회 대북 비판에 “美 핵무기 폐기해야” 응수(연합뉴스)	
	北, 유엔 회의서 “美 반테러전은 새로운 침략전쟁 책동”(연합뉴스)	

10.8	트럼프 “北과 대화·합의 효과 없어…단 한 가지는 효과 있을 것”(연합뉴스)
10.10	유엔, 北제재위반 선박 4척에 입항금지…석탄 등 금수품 실어(연합뉴스)
10.11	대북 압박 강화하는 호주…北 청소년 축구팀 입국도 거부(연합뉴스)
10.12	UAE도 북한인 비자 신규발급 유예…대사급 외교 중단(연합뉴스)

■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고 일자	보고 내용	수행자	비고
9.30	김정은, 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 공개활동	최룡해, 김용수, 조용원, 조남진, 한광상	-
10.8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 주제	-	-
10.13	만경대혁명학원 방문	최룡해, 리일환, 김용수, 김여정, 조용원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9. 30.

■ 北 김정은, 이번엔 농장 시찰…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1116호 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며 “농장에서 육성해낸 다수확 품종의 농작물들을 보신 다음 새로 건설한 연구소를 돌아보시였다”고 30일 보도함.
-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이 농장을 시찰하면서 첨단농업과학연구소를 세우라고 지시했고, 이후 군부대와 연구소 일꾼들은 짧은 기간 연구소 건설과 다수확 품종 종자 육성 성과를 거뒀다고 중앙통신은 소개함.
- 김정은은 새로 건설된 연구소와 온실 등을 둘러보면서 “농장에서는 다수확 품종의 종자를 연구하는 것과 함께 온 나라에 널리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함.

2017. 10. 8.

■ 北,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김정은 “병진노선 변함없이 나가야”(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7일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핵-경제 건설 병진노선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력갱생을 통한 체제의 극복을 강조함.
-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오늘의 현실을 통하여 우리 당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틀어쥐고 주체의 사회주의 한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것이 천만번 옳았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대하여 확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전함.
- 중앙통신은 “위원장 동지께서는 당의 병진노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국가 핵무력 건설의 역사적 대업을 빛나게 완수할 데 대하여 언급했다”고 밝혔으며, 그러나 북한이 공개한 김정은의 전원회의 보고내용에는 미국 등을 향한 구체적인 군사적 조치나 위협은 담기지 않음.

2017. 10. 13.

■ **北 김정은, 만경대혁명학원 방문…“핵심공간 키워내”(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설립 70주년을 맞은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하고 “핵심 공간을 많이 키워냈다”고 치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함.
- 김 위원장은 혁명학원에 세워진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참배하고 교직원,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으며, 이어 새로 건설된 혁명사적관과 강의실, 종합체육관, 수영장 등을 둘러봤음.
- 김정은은 “주체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골간들, 핵심부대를 키우는 만경대혁명학원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원아(학생)들을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혁명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고 독려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10. 8.

■ **北 최룡해·김여정·최취 약진…‘김정은 당’으로 물갈이(연합뉴스)**

- 8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인사에서 최룡해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당 중앙군사위원으로 보선됐고 당 부장으로 임명됨.
- 김여정은 2014년 3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에 선출되고, 지난해 5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에 이름을 올렸는데, 실제 역할과 비교해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이번에 노동당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국 후보위원’에 합류함.
- 전원회의는 과거 노동당 비서에 해당하는 당 중앙위 부위원장에 대해 “해임 및 선거하였다”면서 “박광호 동지, 박태성 동지, 태종수 동지, 박태덕 동지, 안정수 동지, 최취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거하였다”고 발표함.

2017. 10. 9.

■ **확 바뀐 北 주석단…최룡해 뜨고, 김기남·최태복 지고(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7일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당 인사들을 대폭 물갈이하면서 권부 서열 변화도 포착됐는데, 조선중앙방송과 노동신문은 전날 조선중앙TV와 마찬가지로 주석단에 자리한 간부들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순으로 호명함.

- 아울러 지난해 5월 북한의 7차 당 대회에서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거 당 비서에 해당)으로 임명된 김기남, 최태복, 곽범기, 리만건은 이번 주석단 명단에서 제외된 반면 지난해 당 중앙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9명 가운데 최룡해,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김영철 등 5명만 주석단에 자리했으며, 이번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 부위원장에 새로 선임된 박광호, 박태성, 태종수, 박태덕, 안정수, 최휘 등 6명 모두 주석단에 이름을 올림.
- 북한이 당 중앙위 부위원장 선임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해임 및 선거’라는 표현을 함께 썼다는 측면에서 김기남을 비롯해 이번 주석단에 자리하지 않은 멤버 4명은 당 중앙위 부위원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임.

다. 주요 기관 행위

2017. 10. 2.

■ 제21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막(연합뉴스)

- 제21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2일 과학기술전당에서 개막했다고 중앙통신이 밝힘.
- 이번 전시회에는 체육성, 조선태권도위원회, 교육위원회, 국가과학원, 각지 체육단, 청소년체육학교 등에서 출품한 체육프로그램, 측정기구, 체육의약품과 영양제, 체육기자재, 도서 및 논문 등 1천 200여 건의 자료가 전시됨.

2017. 10. 5.

■ 北, 분야별 과학기술 발표회 잇따라 열어(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목표로 내세운 가운데 최근 분야별 과학기술 성과 발표회를 잇따라 열고 있음.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1일 “전국 석탄공업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북창지구 탄광연합기업소 남덕청년탄광에서 진행됐다”라며 석탄연구원, 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국가과학원 산하 기관들,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성 석탄공업대학 등의 교수 연구사들이 참가한 발표회에는 170여 건의 논문이 제출됐다고 밝힘.
- 중앙통신은 같은 날 “제10차 전국 가설 및 착상 발표회가 동해지구와 서해지구로 나뉘어 함흥시와 사리원시에서 진행됐다”며 “발표회에서는 전력·금속·화학·석탄·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며 정보공학, 나노기술, 생물공학 등 핵심 기초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350여 건의 가설과 착상들이 소개됐다”고 전함.

2017. 10. 8.

■ **北,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20주년 대규모 경축대회(연합뉴스)**

- 북한은 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동당 총비서 추대 20주년을 맞아 공식매체와 대규모 경축행사 등을 통해 ‘수령 결사옹위’와 반미 대결전에서의 단결을 주장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김정일의 생전 업적을 부각하며 “오늘의 반미 대결전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떨치도록 하는데 당 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독려함.
- 아울러 “수령 결사옹위를 제일 생명으로, 최대의 사명으로 간직하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 보위하여야 한다”고 촉구함.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7. 10. 4.

■ **유엔주재 北대사 “제재 불법·부당…더 큰 용기 불러올 뿐”(연합뉴스)**

- 자성남 주유엔 북한대사는 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경제금융위원회에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를 강하게 비난함.
- AP통신에 따르면 자 대사는 유엔 대북제재를 “불법적이고 부당하다”고 규정하고 미국이 이를 이행하도록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것은 “우리의 평화로운 경제를 완전히 봉쇄하려는 정신 나간 시도”의 일환이라고 말함.
- 그는 “미국이 전례 없는 핵 위협과 협박, 경제 제재, 생존·개발의 권리를 부정하는 봉쇄에 집착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더 날카로운 경계와 더 큰 용기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덧붙임.

2017. 10. 6.

■ **北, ‘개성공단 의류공장 가동설’에 “공장 더 힘차게 돌아갈 것”(연합뉴스)**

- 북한이 개성공단 내 의류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최근 외국 언론 보도와 관련, 자신들이 공단에서 무엇을 하든 상관할 일이 아니라며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대외 선전매체를 통해 밝힘.
- 북한 대외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6일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흉칙한

수작질’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우리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공업지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에 대하여 그 누구도 상관할 바가 없다”고 주장함.

- 이어 “미국과 그 졸개들이 제 아무리 짓어대며 제재 압살의 도수를 높이려고 악을 써대도 우리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며 공업지구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함.

2017. 10. 10.

■ **北, 당 창건일에 “병진 기치 들고 반미 최후승리 앞당기자”(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 창건 72주년인 10일 “위대한 (핵·경제)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미 대결전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야 한다”고 독려했으며, 신문은 이날 1면 사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자위적 국방력은 주체조선의 존엄이고 자주권이며 승리의 담보”라고 강조함.
- 신문은 또 “국방공업 부문에서는 당의 병진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국가 핵무력 건설의 역사적 대업을 빛나게 완수하여야 한다”며 “유사시에는 전민항전에 노도같이 떨쳐나 반미 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본때를 만방에 떨쳐야 한다”고 주장함.
- 아울러 “자강력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경제제재 책동을 짓부수며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업을 완성해나갈 수 있게 하는 위대한 동력”이라면서 자립적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난 7일 당 중앙위 제7기 2차 전원회의 보고 내용을 반복함.

2017. 10. 12.

■ **北 외무상 “핵무기 대상 협상 동의 못해…美와 힘 균형 거의 도달”(연합뉴스)**

-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자국 핵무기를 협상 대상으로 한 대화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함.
- 타스통신은 리 외무상이 평양을 방문한 자사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우리는 미제와 실질적 힘의 균형을 이루는 최종 목표를 향한 길에서 거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했다”면서 “미제의 대조선(대북) 압살 정책이 근원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핵무기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함.
- 리 외무상은 이어진 다른 질문에 답하면서도 “우리의 원칙적 입장은 핵무기가

대상이 되는 어떤 협상에도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라고 거듭 주장했으며, 그는 “최고영도자(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 7일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우리의 핵무기는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조국의 운명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피나는 투쟁의 결과이며 역내 평화와 안전, 조선 민족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보장하는 억제력이라고 성명했다”고 상기시킴.

■ 北 신문 “핵무력 완성 목표달성 똑똑히 보게 될 것”(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가 저들의 제재·봉쇄와 군사적 압살 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며 국가 핵무력 완성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가를 제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노동신문은 이날 ‘최후 승리를 기어이 안아오고야 말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으며, 신문은 미국 전략폭격기 B-1B 편대의 한반도 잇단 출동과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투입한 한미 연합해상훈련 계획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핵 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 전개하면서 북침전쟁 광기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함.
- 그러면서 “미국이 제아무리 발악해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이 길에서 끝장을 보고야 말겠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밝혔으며, 신문은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은 대화탁에 올려놓을 협상물이 아니며 그 무엇과 맞바꾸기 위한 흥정물도 아니다”라면서 “우리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우리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미국과의 총결사전을 위한 최강의 보검”이라고 주장함.

■ 유엔주재 北 대사 “경제봉쇄 최대 피해자는 어린이” 강변(연합뉴스)

-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11일 유엔총회 제72차 회의 3위원회 회의 연설에서 “경제봉쇄와 제재의 최대 피해자는 다름 아닌 어린이들”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함.
- 자 대사는 “아동권리 보호증진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의 하나로 내세우고 제일 좋은 것을 제일 먼저 어린이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힘.
- 그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집요하고 악랄한 제재와 봉쇄책동은 아동권리보호사업의 순조로운 발전은 물론 어린이들의 생존에까지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어 “극악한 제재로 지금 학생용 교과서와 학습장을 비롯한 교구비품 생산과 지어(심지어) 어린이 영양을 위한 생산부문에까지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함.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10. 10.

■ 北 특수전부대, 패러글라이더로 한미연합사 침투훈련(연합뉴스)

-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 합참 등에 따르면 북한군 특수전 부대는 지난달 중순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해 한미연합사령부를 기습 침투해 장악하는 훈련을 수일 동안 반복 실시한 것으로 알려짐.
- 패러글라이더는 조작이 쉽고 장비 무게도 3~4kg에 불과해 특수전 부대 요원들이 접어서 등에 메고 산으로 올라가 언제든지 기습 침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북한군 특수전 부대 요원들이 패러글라이딩 하면서 연합사를 겨냥한 기습 침투훈련을 한 사실이 포착된 것은 처음임.
- 북한군은 특수전 훈련장에 한미연합사령부 모형건물을 만들어 침투훈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북한군이 특수전 훈련장에 청와대 모형건물을 세워 놓고 침투훈련을 한 사실은 공개됐으나 한미연합사령부 모형건물을 만든 것이 식별된 것도 처음임.

나. 한국 및 미국

■ 특이사항 없음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2017. 10. 3.

■ RFA “北, 개성공단 내 의류공장 은밀하게 가동”(연합뉴스)

- 북한에서 임가공 사업을 하는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RFA(미국 자유아시아방

송)에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내 19개의 의류공장을 남측 당국에 통보하지 않고 은밀하게 가동하고 있다”고 전함.

- 그러면서 소식통은 “개성공단 의류공장에서는 북한 내수용 의류도 생산하고 있지만, 주로 외국(중국)에서 발주한 임가공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함.
- 중국의 또 다른 소식통은 “개성공단 의류공장을 가동하는 문제는 북한 당국이 각별히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공장 밖으로 불빛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가림막(커튼)으로 차단했다”고 말했으며, 이 소식통은 북한이 개성공단 의류공장을 가동한 지 이미 6개월이 넘었다고 주장함.

다. 대외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7. 10. 5.

■ “北, 평양 1주일 비우는 주민 구속…무허가 주류 판매시 추방”(연합뉴스)

- 북한의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보위성이 지난 8월 평양에서 열린 주민대상 강연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평양을 1주일 이상 비우는 사람은 구속하겠다고 밝혔다고 도쿄신문이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5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에서는, 예를 들어 평양 시민이 시외로 나갈 경우 평양 당국에서 출장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목적지에 가서는 해당 지역 당국을 찾아 도착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은 당국자들에 뇌물을 주면 무신고로 이동해도 목인을 해 준 사례가 있었으나 통제가 강화된 모습을 보임.
-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이 평양 시내의 음식점에 대해서도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으며, 이 관계자는 당국의 허가 없이 가게에서 손님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된 사람은 평양 밖으로 추방된다고 덧붙였다.

2017. 10. 10.

■ 北, 당 창건일 축제 분위기 조성…각지서 공연·무도회(연합뉴스)

-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 72주년인 10일 각지에서 공연과 무도회 등을 열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평양의 모란봉극장, 국립연극극장, 평양대극장, 평양교예극장, 국립교예단 요술극장, 당창건기념탑광장 등지에서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의 공연이 열렸으며, 또 황해도, 자강도, 함경북도를 비롯한 각 도의 예술단체 예술인들도 경축공연무대를 펼침.

- 북한의 당과 내각, 중앙기관 등의 일꾼들은 이날 당창건사적관을 참관했으며 군 장병들,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함.
- 북한의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이날 “오늘 전국 각지의 봉사망들도 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근로자들로 흥성이었다”며 “우리 당의 뜨거운 은정 속에 마련된 문수물놀이장과 능라인민유원지, 미림송마구락부, 인민야외빙상장, 능라급등어관, 능라입체유희동영화관도 각 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로 해서 기쁨과 환희가 한껏 넘쳐났다”고 분위기를 전함.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7. 10. 2.

■ 러 통신업체, 北인터넷 서비스개시…“北, ‘접촉차단’ 대응 쉬워져”(연합뉴스)

- 러시아 통신업체 ‘트랜스텔레콤’이 북한에 새로운 인터넷망을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함.
- 통신은 사이버 보안업체 ‘파이어아이’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북한은 중국 국영회사가 운영하는 기존 인터넷망과 더불어 복수의 인터넷 접속 수단을 갖게 됐다고 밝힘.
- 파이어아이 아·태 지역 최고기술책임자(CTO)인 브라이스 볼랜드는 “북한이 러시아를 경유하는 추가 통로를 갖게 됨으로써 미국의 인터넷 접촉차단 압박 가능성에 대해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됐다”고 지적함.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9. 30.

■ 北 아태평화위, 트럼프 대통령 원색 비난(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아태평화위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최근 발언 등을 언급하며 “늑다리 미치광이 트럼프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더욱더 히스테리적인 발작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함.
- 담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은행들의 대북 금융거래 차단에 초점을 맞춘 새 대북 독자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군이 북한 동해 국제공역에 전략폭격기 B-1B를 전개한 사실 등도 거론하며 비난을 이어감.
- 담화는 “임의의 시각에 징벌의 불을 뿜을 만단의 태세에 있는 우리 혁명무력 앞에서 썩은 제재 막대기를 휘둘러대고 부나비 같은 것들이나 날려 보내며 객기를 부리는 것은 미국땅을 통채로 핵 불바다로 만드는 자살행위로 될 뿐”이라고 위협함.

2017. 10. 1.

■ 틸러슨, 美北 직접접촉 첫 확인…‘뉴욕채널’ 등 재기동하나(연합뉴스)

- 중국을 방문 중인 틸러슨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소통 라인을 가지고 있다. 북한과 2~3개 정도의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며 막후 직접 채널을 통해 대화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말함.
-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기본 원칙은 평화적 해결”이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당면한 행동은 사태를 진정시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함.
-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북핵 문제를 두고 대북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대화 의지를) 살펴보고 있다. 그러니 지켜봐 달라”고 말해, 그가 소개한 대화 채널이 핵·미사일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수준의 소통 창구는 아니라는 점을 시사함.

2017. 10. 2.

■ **北 “美 초강도 제재, 효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2일 미국의 독자제재조치와 미 연방하원이 통과시킨 북한인권법 등을 거론하며 초고강도 제재압박이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장함.
- 민화협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초강도 제재압박 소동에 미쳐 날뛰면서 그 무슨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바닷물이 마르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이라며 “우리의 일심단결과 자강력에 의해 처참하게 짓뭇개지고야 말 것”이라고 밝힘.
- 담화는 우리 정부에 대해 “전 세계가 날로 무모해지는 트럼프의 분별없는 망동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때에 미국의 핵전략 자산들을 끌어들이려고 발광하고 있다”며 “이것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함.

2017. 10. 3.

■ **백악관, ‘대북 대화론’ 거듭 일축 “지금은 대화할 시간 아니다”(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제기한 ‘대북 대화론’에 대해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음.
-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은 대화할 시간이 아니라는 데 대해 우리는 확고하다”면서 “오토 워비어처럼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을 석방하기 위한 종류의 대화만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대화”라고 말함.
- 그는 “현 시점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어떠한 북한과의 대화도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으며, 샌더스 대변인은 또 “대화과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우리는 지속해온 대북 외교적 압박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함.

2017. 10. 6.

■ **북, 유엔총회 대북 비판에 “美 핵무기 폐기해야” 응수(연합뉴스)**

- 최근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제72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비판이 이어지자 북한도 대미 비난으로 맞서고 있음.
- 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최근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담당)의 군축 일반토의에서 상당수 국가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활동을 거론하며 자제를 촉구함.

- 그러나 북한 대표는 “미국 정권이 세계 평화와 안보를 바란다면 모든 핵무기를 먼저 폐기해야 할 것”이라며 자신들의 궁극적 목적은 미국과 동등한 힘의 균형을 갖추는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며, 북한 대표는 별도의 발언에서는 일부 나라들이 한반도 문제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프랑스와 일본 등 북한을 규탄한 나라들을 비난했다고 VOA는 덧붙였다.

■ 北, 유엔 회의서 “美 반테러전은 새로운 침략전쟁 책동”(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일 “조선(북한) 대표가 유엔 총회 제72차 회의 6위 원회(법률문제 담당)에서 안건 ‘국제 테러 제거 조치’ 토의에 참가하여 테러와 관련한 공화국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천명하였다”며 발언 내용을 소개함.
- 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대표는 “미국의 ‘반(反)테러전’은 본질에 있어서 미국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한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한 국가테러 행위이며 인류에게 재난과 불행만을 들뜨우는 새로운 변종의 침략전쟁 책동”이라고 주장함.
- 그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원이 북한 최고수뇌부를 상대로 생화학 테러를 모의했다는 북한의 지난 5월 주장을 다시 거론하며 “테러 원흉으로서의 미국의 정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변함.

2017. 10. 8.

■ 트럼프 “北과 대화 합의 효과 없어…단 한 가지는 효과 있을 것”(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과의 오랜 협상이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단 한 가지 수단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전임) 대통령들과 그 정부는 25년간 북한과 대화해왔으며, 많은 합의가 이뤄졌고, 막대한 돈도 지불됐으나 효과가 없었다”면서 “합의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북한에 의해) 훼손돼 미국 협상가들을 바보로 만들었다”고 말함.
-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유감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만 그는 그러나 ‘단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음.

나. 북·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북·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북·러 관계

2017. 9. 30.

- 北 “러시아와 회담서 한반도 정세 심도 있는 의견교환”(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29일 러시아 연방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조로(북러) 쌍무회담이 진행되었다”며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이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러시아 외무부 특임대사와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아태지역 담당 외무차관과 만난 사실을 전함.
- 최 국장은 회담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려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함.
- 러시아는 이런 북한의 입장에 이해를 표시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통신은 주장함.

2017. 10. 5.

- 푸틴 “2001년 방북 때 김정일이 원자탄 보유 밝혀…이제 수소탄”(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미 지난 2001년에 당시 북한의 최고지도자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의 핵무기 존재에 대해 들었다고 밝혔는데, 2001년은 북한이 처음으로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한 2005년 2월보다 훨씬 이른 시점임.
-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에너지 포럼 전체회의에 참석해 연설하며 “2001년 일본으로 가는 길에 북한에 들러 현 북한 지도자의 아버지(김정일 국방위원장)와 만났으며 그가 당시 내게 ‘원자탄을 보유하고 있다. 단순한 대포로 그것을 서울까지 쉽게 날려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 이어 “지금은 2017년이다. 북한은 지속적 제재 상황에서 살고 있지만 이제

원자탄이 아닌 수소탄을 갖고 있다. 또 단순한 대포가 아니라 사거리 2천 700km의 중거리 미사일과 사거리 5천km의 미사일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계속된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임.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10. 1.

■ 이탈리아도 北대사 추방…스페인 이어 유럽서 2번째(연합뉴스)

- 안젤리노 알파노 이탈리아 외교장관은 1일 이탈리아 일간 라 레푸블리카 인터뷰에서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를 이탈리아에서 추방할 것이라고 밝힘.
- 알파노 장관은 이런 조치는 국제 사회가 취하고 있는 대북 강경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그는 “북한은 최근 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전례 없는 핵실험을 강행했고, 계속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국제 사회에 북핵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임.

2017. 10. 10.

■ 유엔, 北제재위반 선박 4척에 입항금지…석탄 등 금수품 실어(연합뉴스)

- 유엔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선박 4척에 국제 입항 금지(global port ban) 조치를 했다고 AP·AFP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함.
- 휴 그리피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조정관은 이날 모든 유엔 회원국에 공개된 회의 말미에 “위원회가 지정한 4척의 배가 있다. 자산 동결이나 여행 금지는 아니고 입항 금지”라며 해당 선박은 회원국의 어느 항구에도 입항할 수 없다고 밝힘.
- 그는 해당 선박들이 “금지된 물자를 운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고 조치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4척의 배가 석탄, 해산물, 철광석과 지난 8월 미국의 제안으로 채택된 유엔 결의안에 의해 금지된 수출품을 싣고 있었다고 AFP에 전함.

2017. 10. 11.

■ **대북 압박 강화하는 호주·北 청소년 축구팀 입국도 거부(연합뉴스)**

-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은 11일 호주 언론그룹 ‘페이팩스 미디어’ 기고문을 통해 세계가 북한의 핵 야욕을 막지 못하면 역내 전체는 물론 중동 지역까지 핵무기가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는데, 북한을 그대로 두면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핵무기와 다른 대량살상무기(WMD)를 불법적으로 손에 넣도록 대담하게 행동에 나서게 할 것이라는 주장임.
- 비숍 장관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군사공격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했지만 호주의 기본 원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대로 경제적 압박을 극대화, 협상장으로 끌어들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결들임.
- 비숍 장관은 다음 달 8일 자국 내에서 열릴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U-19 챔피언십 예선전과 관련, 북한팀 비자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는데, 비숍 장관은 성명에서 “그 팀을 초청하는 것은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정부의 강한 반대에 어긋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려는 우리 노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함.

2017. 10. 12.

■ **UAE도 북한인 비자 신규발급 유예·대사급 외교 중단(연합뉴스)**

- 아랍에미리트(UAE) 외무부는 앞으로 북한 여권 소지자에 대해 입국 비자를 신규로 발급하지 않고, 북한 기업의 사업허가도 새로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힘.
- UAE 외무부는 북한의 비상주 대사와 자국의 북한 담당 비상주 대사를 폐지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그간 유지했던 양국 간 대사급 외교 관계를 중단한 셈임.
- UAE 외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71호와 2375호를 준수하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했다”고 설명함.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9.30		트럼프, 11월 3~14일 한중일 순방...한반도정세 분수령되나 (연합뉴스)
	10.5	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사실상 합의...다음주 국회 보고(연합뉴스)	
	10.11	송영무 국방장관, 리드 美 상원의원 면담...북핵공조 논의(연합뉴스)	
	10.12	송영무 국방장관 “한반도서 미국 단독의 전쟁 없을 것”(자유아시아방송)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10.2		“한국대사도 사드반대 이해”... 中에 이용되는 ‘노영민 발언’(동아일보)
	10.10		中, 노영민 대사 부임에 “한중관계 개선에 적극 역할 기대”(연합뉴스)
	10.12		中인민일보 “사드, 韓中 통화스와프 연장에 걸림돌 될수도”(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10.11		日 고노 외무상 “한중일 정상회의 12월 개최 추진”(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10.11		러 “한국 배치 美 사드 시스템 北 아닌 러·中 겨냥한 것”(연합뉴스)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9.30	틸러슨 美국무, 베이징 도착...왕이·양제츠와 회담(연합뉴스)	
		시진핑-틸러슨 베이징서 회동...“양국 협력 중요”(연합뉴스)	
		美-中, 워싱턴서 ‘대북제재 이행’ 점검회의 열어(동아일보)	
	10.6	美 하원 금융위, 대북금융제재법안 발의...北과 거래 中 은행 정조준 (뉴시스)	
	10.7	미-중, 범죄인 송환협력 합의...불법이민 30일 이내 송환 절차(연합뉴스)	
	10.11		美이지스함, 남중국해 항행 작전에 中군함·군용기 맞대응(연합뉴스)
10.12		中, 美 전략폭격기 B-1B 한반도 전개에 “자극행위 자제하라”(연합뉴스)	
			中, 美에 “다발적 반덤핑조사 말라...시장경제지위 인정하라” (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10.4	아베, 트럼프와 통화...“美 총격사건 애도·대북 공조 재확인”(연합뉴스)	
	10.5	美, 일본에도 거센 통상압력 가할듯...“쇠고기 관세 내려야” (연합뉴스)	
	10.7		日, 중거리 ‘암람’ 공대공미사일 美서 대거 도입(연합뉴스)

	10.11	美핵항모 '로널드 레이건', 日호위함과 공동훈련(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10.10	미국-러시아 "언론이 공작원" 서로 제재 협박(연합뉴스)	
			러 외무 "美 군비강화로 초래되는 한반도 긴장 고조 허용 못 해" (연합뉴스)
	10.12		美 폐쇄 러시아 외교공관서 러 국기 철수...러 발끈(연합뉴스)
	10.13		러 외무, 킬러스에 "한반도 긴장고조 중단" 거듭 요구(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10.2		日아베, 다음달 APEC·ESA에서 中·러 정상과 회담(연합뉴스)
	10.5		일본 "중국 선박 센카쿠 침범, 공식 항의"(미국의소리)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10.1	아베 "내달 푸틴 만나 러·일 평화조약 체결 논의"(뉴스1)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9. 30.

■ 트럼프, 11월 3~14일 한중일 순방...한반도정세 분수령되나(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3~14일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5개국을 순방한다고 백악관이 29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함.
-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 목적에 대해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국제적 결의를 강화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함.
-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 다자회담과 문화일정에 참석할 것이며 이는 해당 지역동맹을 향한 그의 지속적인 헌신과 미국의 파트너십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공정하고 호혜적인 경제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임.

2017. 10. 5.

■ 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사실상 합의...다음주 국회 보고(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이 4일(현지시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절차에 사실상 착수하기로 합의함.
-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오전 워싱턴 DC USTR 청사에서 한미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음.
- 이날 합의로 한미 양국은 각각 국내법에 따라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우리 측 협상 주체인 통상교섭본부는 다음 주 국회에 이번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감.

2017. 10. 11.

■ **송영무 국방장관, 리드 美 상원의원 면담…북핵공조 논의(연합뉴스)**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1일 한국을 방문 중인 잭 리드 미국 상원의원(민주당)을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미 양국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를 찾아온 미 상원 군사위원회와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소속 리드 의원과 면담함.
-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적인 수사 위협 등을 강력히 규탄했으며, 리드 의원은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미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함.

2017. 10. 12.

■ **송영무 국방장관 “한반도서 미국 단독의 전쟁 없을 것”(자유아시아방송)**

- 한국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국이 한국과 협의 없이 북한과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없다”고 발언함.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발언함.
- 송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하게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함.

나. 한·중 관계

2017. 10. 2.

■ **“한국대사도 사드반대 이해”… 中에 이용되는 ‘노영민 발언’(동아일보)**

- 중국 매체들이 지난달 29일 노영민 신임 주중 한국대사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발언을 인용 보도하며 자국의 사드 주장과 보복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이날 한국의 여러 매체가 보도한 노 대사의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한국의 후임 주중 대사가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보도함.

- 환추시보는 노 대사가 자신을 “친중파”라고 얘기했으며 “사드 레이더의 탐측 거리가 800~2000km인데 중국이 이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고 보도함.

2017. 10. 10.

■ **中, 노영민 대사 부임에 “한중관계 개선에 적극 역할 기대”(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노영민 신임 주중 한국대사가 10일 부임한데 대해 한중 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절은 주재국과 파견국의 우위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자(使者)이고 우리는 대사가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양국 관계의 양호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길 희망한다”고 발언함.

2017. 10. 12.

■ **中인민일보 “사드, 韓中 통화스와프 연장에 걸림돌 될수도”(연합뉴스)**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영문판은 12일 논평을 통해 “사드 갈등 속에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전문가와 매체들은 사드 갈등 때문에 중국이 통화 스와프 연장을 거절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함.
- 이 신문은 한중 통화 스와프 규모가 560억 달러로 한국이 체결한 통화 스와프 총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통화 스와프 연장이 무산되면 한국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함.
- 잔더빈(詹德斌)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한반도연구센터 주임도 “만약 양국 간 통화 스와프 협정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이미 긴장된 한국 금융시장은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

다. 한·일 관계

2017. 10. 11.

■ **日 고노 외무상 “한중일 정상회의 12월 개최 추진”(연합뉴스)**

- 일본이 오는 12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도쿄(東京)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함.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10일 자민당의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한중일 정상회의를 12월 개최하는 방향으로 일정 조정을 하려 하고 있다”고 발언함.
- 아사히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도쿄 개최가 성사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고 설명함.

라. 한·러 관계

2017. 10. 11.

■ 러 “한국 배치 美 사드 시스템 北 아닌 러·中 겨냥한 것”(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가 한국에 배치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가 북한 공격 대응용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함.
-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 북미국 게오르기 보리센코 국장은 11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자산(사드)은 외부 공격을 받은 북한이 대응 공격을 할 경우 이를 방해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주장함.
- 또한 “러시아와 중국은 사드가 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함.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9. 30.

■ 틸러슨 미국무, 베이징 도착…왕이·양제츠와 회담(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30일 중국에 도착,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잇달아 만나며 방중 일정을 시작함.
- 중국 중앙(CC)TV와 인민일보 해외판인 해외망(海外網), 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중국을 방문한 틸러슨 장관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만나 양국 주요 현안을 논의함.
- 틸러슨 장관은 왕 부장과 회담을 마친 뒤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도 회동했으며, 양 국무위원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각료들도 다가오는 정상회담을 매우 고대한다”고 전함.

■ 시진핑-틸러슨 베이징서 회동..“양국 협력 중요”(연합뉴스)

- 중국을 방문 중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30일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함.
- 중국 중앙(CC)TV와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틸러슨 장관이 이날 오후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회담한 데 이어 시 주석을 예방했다고 보도함.
- 이번 회담에서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문과 북핵문제 등 양국 현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으며, 시 주석은 “중국은 조만간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방문이 성공적이고 특별한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양국 실무단이 공동 노력하고, 밀접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발언함.

■ 美中, 워싱턴서 ‘대북제재 이행’ 점검회의 열어(동아일보)

-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정밀 점검하는 공동 실무회의를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에서 개최한 것으로 29일 확인됨.
- 미국 국무부 핵심 관계자는 2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5일 유엔 대북제재 결의(2371호) 통과 이후 미중 양국이 협의를 거쳐 미국 워싱턴에 실무팀을 꾸린 뒤 중국이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발언함.
- 외교 소식통은 “28일 중국이 전격 발표한 중국 내 북한 기업 전면 퇴출 조치 역시 실무회의에서 결의 이행 여부를 꼼꼼히 따지는 미국의 압박에 부담을 느낀 결과물로 볼 수 있다”고 발언함.

2017. 10. 6.

■ 美 하원 금융위, 대북금융제재법안 발의...北과 거래 中 은행 정조준(뉴시스)

- 미 의회가 나서 대북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5일 보도함.
- RFA에 따르면 미 하원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2017대북 금융 차단법(Impeding North Korea’s Access to Finance Act of 2017)’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외국 금융기관을 통한 북한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외국 금융기관이 미 은행에 환계좌(개인-은행 간 계좌)와 대리계좌(은행-은행 간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북한과 거래해온 중국은행을 정조준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임.

2017. 10. 7.

■ **미·중, 범죄인 송환협력 합의…불법이민 30일 이내 송환 절차(연합뉴스)**

- 7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미·중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달 3일부터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법집행·사이버보안대화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 귀성쿤(郭聲琨) 중국 공안부장과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이 참석함.
- 양국은 우선 이번 대화에서 범죄인 조사와 송환 문제 등에 협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정기적 회동과 실무팀을 구성키로 함.
- 아울러 인터넷 안전을 위해 정보공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기존의 핫라인도 그대로 유지해 긴급한 범죄나 중대 안전사고에 즉각 대응하고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키로 함.

2017. 10. 11.

■ **美이시스함, 남중국해 항행 작전에 中군함·군용기 맞대응(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이 북핵 및 무역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미국 해군 이지스함이 중국과 베트남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베트남명 호양사군도) 인근 해역을 또 항행하자 중국이 군함과 군용기까지 동원해 맞대응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군 구축함 채피가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제멋대로 중국 시사군도 영해로 들어와 소위 ‘항행 자유’라는 작전을 진행했다. 중국 측은 즉각 군함과 군용기를 출동시켜 법에 따라 미 구축함에 대한 식별 작업을 하고 물러나라고 경고했다”고 밝힘.
- 화 대변인은 “시사군도는 중국 고유 영토로 미군의 이런 행동은 중국법과 국제법을 어긴 것이며 중국 주권과 안전 이익을 엄중히 침해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결연히 반대함과 동시에 이미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강조함.

■ **中, 美 전략폭격기 B-1B 한반도 전개에 “자극행위 자제하라”(연합뉴스)**

-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10일 밤 한반도 상공에 전략무기인 B-1B ‘랜서’ 장거리전략폭격기 편대를 전개한 데 대해 중국이 자극행위를 서로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연합뉴스 기자의

- 관련 질문에 “현재 한반도 정세는 고도로 복잡하고 민감하다”고 운을 뗀 뒤 “우리는 유관 각국이 냉정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함.
- 그는 이어 “중국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면서 “상호 대립과 긴장을 고조하거나 서로를 자극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함.

2017. 10. 12.

■ **中, 美에 “다발적 반덤핑조사 말라…시장경제지위 인정하라”(연합뉴스)**

- 중국 상무부의 가오핑(高峰) 대변인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중미는 경제무역관계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전망도 밝다”면서 “중국은 미국과 상호 존중하고 윈-윈(Win-win)하는 관계를 바라고 있다”고 발언함.
- 가오 대변인은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에 대한 미국의 검토 방침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15조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1일부로 중국에 대한 반덤핑조사에서 ‘대체국 가격’ 적용은 시효가 만료됐다면서, 미국을 겨냥해 규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함.
- 또 미국 기업들과 무역단체들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으로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비난하는 데 대해 중국은 시종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방적이고 보호주의 조치는 반대한다고 밝힘.

나. 미·일 관계

2017. 10. 4.

■ **아베, 트럼프와 통화…“美 충격사건 애도·대북 공조 재확인”(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4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해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고 대북 공조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10시께부터 10여 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함.
- 아베 총리는 통화 후 기자들에게 핵 개발 등을 계속하는 북한 대응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교환, 앞으로도 미·일 양국이 협력해 대응한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힘.

2017. 10. 5.

■ **美, 일본에도 거센 통상압력 가할듯…“쇠고기 관세 내려야”(연합뉴스)**

- 미국 농무장관이 일본과의 양자 간 무역 협상 필요성을 강조,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때 일본에 대한 시장 개방 압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함.
- 아사히는 미국발 기사에서 피두 장관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강연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과 그 밖의 많은 제품에 걸리는 높은 관세를 내리고 싶다. 일본과의 2국간 무역 협상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함.
- 신문은 이달 미일경제대화과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이 예정돼 있다며 이들 자리에서 농업문제가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함.

2017. 10. 7.

■ **日, 중거리 ‘암람’ 공대공미사일 美서 대거 도입(연합뉴스)**

- 북한의 잇따른 핵·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책 마련에 부심해온 일본이 이르면 연내 배치할 F-35A ‘라이트닝 2’ 스텔스 전투기에 장착할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미국으로부터 대거 도입함.
- 6일(현지시간) 미 국방안보협력처(DSC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일본 정부가 요청한 1억1천300만 달러(1천295억5천만 원) 규모의 AIM-120C-7(암람) 공대공미사일 56발에 대한 판매를 승인함.
- 미 국방전문 매체 디펜스뉴스는 일본은 이 미사일을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 등에 장착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F-35A의 핵심 공대공 화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2017. 10. 11.

■ **美해항모 ‘로널드 레이건’, 日호위함과 공동훈련(연합뉴스)**

- 일본 나가사키(長崎) 현 사세보(佐世保)기지 소속의 해상자위대 호위함 ‘시마카제’가 지난 7일부터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과 공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대만 남쪽 바시해협 주변부터 일본 오키나와(沖縄) 인근에서 공동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힘.

- 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북한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자 로널드 레이건함과 해상자위대 소속함이 이르면 내주 동해에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

다. 미·러 관계

2017. 10. 10.

■ 미국-러시아 “언론이 공작원” 서로 제재 협박(연합뉴스)

-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어 방송 채널 ‘커런트 타임’을 인용, 러시아 법무부가 이 채널을 외국 정부의 선전을 담당하는 외국 대행사로 분류한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함.
- 러시아 법무부는 방송사에 통보하면서 자국법에 따르면 러시아 언론의 보도에 제약을 가하는 국가의 언론사를 제약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함.
- FT는 러시아 법무부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 정부가 자국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정부 지원 언론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러시아 측이 이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던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도함.

■ 러 외무 “美 군비강화로 초래되는 한반도 긴장 고조 허용 못 해”(연합뉴스)

- 러시아가 미국의 한반도 주변 지역 군비 강화를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 러시아 외무부는 9일(현지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렉스 텔러슨 미국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언론보도문을 통해 전함.
- 외무부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통화에서 “미군의 역내 군사적 대비(군비강화)로 초래되는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를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으며, 한반도 위기를 전적으로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함.

2017. 10. 12.

■ 美 폐쇄 러시아 외교공관서 러 국기 철수…러 발끈(연합뉴스)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11일(현지시간) 전(前) 샌프란시스코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과 워싱턴 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 건물 등에 게양돼 있던 러시아 국기를 철수시킴.
- 주미 러시아 대사관은 이같은 미국 측의 조치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과

- 워싱턴 무역대표부 건물로 러시아 국기를 즉각 되돌려 놓고 향후 유사한 행동을 방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표명함.
-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는 “이를 아주 비우호적 행보로 간주한다”면서 “이같은 행보는 러-미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난함.

■ 러 외무, 톨러슨에 “한반도 긴장고조 중단” 거듭 요구(연합뉴스)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렉스 톨러슨 미국 국무장관에게 한반도 긴장 고조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12일 밝힘.
-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장관이 톨러슨 장관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한반도 상황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긴장 고조를 그만둬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요구했으며, 정치적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함.
- 라브로프 장관은 또 이날 통화에서 미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압류된 러시아 자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함.

라. 중·일 관계

2017. 10. 2.

■ 日아베, 다음달 APEC·ESA에서 中·러 정상과 회담(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각각 러시아, 중국 정상을 만날 계획이라고 2일 밝힘.
-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오는 22일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날 도쿄(東京)에서 열린 거리 연설에서 “11월에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온다”며 “또 APEC 정상회의와 EAS에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도 회담을 하게 돼 있다”고 직접 밝힘.
-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북한 위기를 둘러싼 자신의 외교적 대응 실적을 과시하는 대목에서 나옴.

2017. 10. 5.

■ 일본 “중국 선박 센카쿠 침범, 공식 항의”(미국외소리)

- 일본 정부는 5일 오전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 4척이 자국 영해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지역을 침범해 1시간 30분 간 머물렀다고 밝힘.

- 일본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이들 선박은 오늘 오전 10시쯤 센카쿠 열도의 우오쓰리시마 부근을 침범했으며, 중국 선박이 이 지역을 침범한 건 이번 해 들어 25번째임.
- 이와 관련해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도쿄주재 중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전달함.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일·러 관계

2017. 10. 1.

■ 아베 “내달 푸틴 만나 러·일 평화조약 체결 논의”(뉴스1)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달 열릴 예정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평화조약 체결 문제를 포함한 폭넓은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힘.
- 지지통신과 니혼게이지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교토(京都)시내에서 열린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 부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이같이 발언함.
- 이와 관련 드보르코비치 부총리는 경제·의료·농업 및 디지털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발전해가길 기대한다고 발언함.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북한인권 국제동향	10.5	유엔 아동권리위 “북한, 어린이 고문과 강제노동 중단해야”(미국의소리)
	10.6	중국, 북한 근로자 ‘취업비자’ 발급도 중단(미국의소리)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유엔주재 北대사와 만남 모색할 것”(연합뉴스)
	10.7	북한, 억류 미국인 영사접견 19개월째 차단(미국의소리)
	10.10	퀀타나 특별보고관 “북한 수용소 여건 비참...부패 늘면서 인권에 악영향”(미국의소리)
	10.12	북 인권결의안, 이달 말 유엔 제3위원회 상정(자유아시아방송)
	10.13	로버트 킹 전 특사 “북한인권특사 폐지, 잘못된 제안” (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10.3	북한노동자, ‘도강증’이용 중국 내 불법취업 의혹(자유아시아방송)
	10.9	FAO “북, 제재와 작황부진으로 식량조기경보15개국에”(자유아시아방송)
	10.11	북 식량사정 현재는 안정세, 전망은 불투명(자유아시아방송)
		UN “북, 아시아에서 재해에 가장 취약”(자유아시아방송)
	10.12	북 해외 노동자, 관리자 묵인하 외부영상 시청(자유아시아방송)
10.13	북 고아수용시설은 철창 없는 감옥(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남한동향	10.2	북한 기아, 전 세계 27번째로 심각...25년 전 비해 개선 안 돼(미국의소리)
	10.11	조명균 “이산가족 문제, 정치·군사와 분리”...北 호응 촉구(연합뉴스)
	10.12	통일부, 北핵실험장 인근 지역 탈북민 대상 연내 피폭검사(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남북자 국군포로	10.1	외교부 “北인권개선 위해 유엔과 함께 분명한 메시지 발신”(연합뉴스)
	10.1	탈북자 가족, 보위성 조사 피하러 ‘신분세탁’ 시도(자유아시아방송)
		올해 1~8월 입국 탈북민 780명...작년비 12.7% 감소(연합뉴스)
	10.3	美 입국 탈북난민 올해 12명...2월 이후 전혀 없어(연합뉴스)
	10.7	美 의회보고서 “탈북민 송환 연루 中 정부·개인 제재해야”(연합뉴스)
	10.9	‘北의 국군포로·남북자 인권침해’ 내년 본격 조사(연합뉴스)
	10.10	내년 미국 난민 탈북자 쿼터 대폭 축소(자유아시아방송)
10.11	통일부 “탈북자 75%, 함경북도·양강도 출신”(자유아시아방송)	
대북지원	10.12	“트럼프 日 방문 때 남북피해자 가족 면담할 듯”...인권 압박 차원(연합뉴스)
	10.2	유엔 1~9월 대북 지원금 목표액 30%도 못 미쳐(자유아시아방송)
	10.10	美 대북지원단체, 北에 의약품 2천만달러어치 지원(연합뉴스)
덴마크적십자사 “북한 관계자, 대북 제재로 인한 어려움 호소”(미국의소리)		

10.12 대북 원조 있으면 간접적 혜택이라도 주민에게 돌아가(연합뉴스)

10.13 미 지원단체, 17일 방북...미 여행금지 예외 적용(미국의소리)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10. 5.

■ 유엔 아동권리위 “북한, 어린이 고문과 강제노동 중단해야”(미국의소리)

- 유엔이 북한 어린이들이 처한 열악한 인권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냄. 어린이들이 고문을 당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고 하며, 북한 당국에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함.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북한 당국에 어린이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함.
- 위원회는 북한의 다섯 번째 정례보고서를 검토한 뒤 4일 발표한 최종 견해에서 이같이 밝힘.
- 특히 강제 복송된 어린이와 길에서 살고 있는 어린이,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시설에 갇힌 어린이에 대한 고문과 다른 가혹행위, 처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함.
- 그러면서 이 같은 고문을 비롯해 다른 가혹행위와 처벌을 법률로 금지하고 가해자를 제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북한 당국에 권고함.
- 또 북한 어린이들이 부모의 범죄 때문에 처벌과 제재를 받거나 구금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이들 어린이들이 원할 경우 정치범수용소 등에 수감된 부모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권고함.
- 아울러 출신 성분이나 부모의 정치적 견해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종식시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2017. 10. 6.

■ 중국, 북한 근로자 ‘취업비자’ 발급도 중단(미국의소리)

- 중국이 자국 내 북한 기업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림. 이로써 ‘옥류관’과 ‘해당화’ 같은 중국 내 북한식당이 문을 닫고, 중국 의류업체에서 일하던 수 만 명이 북한으로 돌아가게 됨. 중국은 북한 근로자에 내주던 취업비자 발급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이 자국 내 북한 기업들에 120일 내에 폐쇄할 것을 통보함. 중국 상무부는 최근 인터넷 공고를 통해 자국 내 북-중 합작기업과 합자기업 등에 대해 내년 1월9일까지 모두 문을 닫으라고 명령함.
- 최근 단둥을 방문한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정은이 책임연구원은 북한 식당들이 철수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함.

2017. 10. 7.

■ **북한, 억류 미국인 영사접견 19개월째 차단(미국의소리)**

- 북한이 억류 미국인들에 대한 현지 스웨덴대사관 관계자의 방문을 19개월째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모두 한국계로, 가장 오래 수감돼 있는 김동철 씨는 억류 2년째임.
- 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6일 'VOA'에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6월 북한을 방문해 억류 미국인들을 만난 것 외에 새롭게 이뤄진 영사접견은 없었다고 밝힘.
- 현재 북한 당국에 잡혀있는 미국인은 총 3명으로 모두 한국계임.

■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유엔주재 北대사와 만남 모색할 것”(연합뉴스)**

-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이달 말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할 때 유엔주재 북한 대사와 접촉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전함.
- VOA에 따르면 키타나 보고관은 이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달 말에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가면 유엔 주재 북한 대사와의 만남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북한 대사와의 대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자신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 북한 당국자들과 직접 이야기할 기회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북한 당국과 비공식적으로 소통을 했다”며 이같이 답함.
- 북한은 키타나 보고관을 포함해 역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들에게 한 차례도 방북을 허용하지 않음.

2017. 10. 10.

■ **퀀타나 특별보고관 “북한 수용소 여건 비참...부패 늘면서 인권에 악영향”(미국의소리)**

- 토마스 오헤아 퀀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내 수감자들과 강제 복송된 사람들에 대한 처우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함. 북한에서 부정부패가 심해지면서 인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함.
-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토마스 오헤아 퀀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밝힘.
- 퀀타나 특별보고관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2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함.

- VOA 가 단독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키타나 특별보고관은 특히 북한 내 수감자들과 강제 복송된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함. 또 북한 주민들 사이에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광범위한 공포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언들을 들었다고 말함.

2017. 10. 12.

■ 북 인권결의안, 이달 말 유엔 제3위원회 상정(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뉴욕 유엔본부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인권 결의안이 오는 31일 유엔의 인권을 다루는 제3위원회에 공식 상정(officially tabled)될 전망이라고 밝힘. 결의안은 다음달 중순 제3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대변인은 덧붙임.
- 유럽연합과 일본 대표부는 현재 작성 중인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을 마무리 짓고, 다음주 공동제안국들과 결의안 초안 문안에 관한 첫 논의를 가질 예정임.
- 대변인은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5월 이뤄진 카타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과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함.

2017. 10. 13.

■ 로버트 킹 전 특사 “북한인권특사 폐지, 잘못된 제안”(미국의소리)

-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새로운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기로 한 렉스 텔러슨 국무장관의 방침을 비판함. 킹 전 특사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의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봄. 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더라도 미국의 행동에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함.
- 킹 전 특사는 “웬비어 씨는 북한인들에 의해 억류됐습니다. 또 북한인들의 통제를 받았고, 그들의 수감 시설에 있었습니다. 웬비어 씨를 억류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함.
- 또한 북한이 테러지원국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가 강력하지는 않으나 북한의 주기적 도발적 행동들은 유엔의 비난을 받았고, 유엔은 매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다고 발언함.
-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변할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북한을 다루는 미국의 행동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강력한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고, 제재의 이행을 위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미국의 대북제재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더라도 미국의 행동에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고 밝힘.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7. 10. 3.

■ 북한노동자, ‘도강증’이용 중국 내 불법취업 의혹(자유아시아방송)

- 북한노동자들이 정식 여권이 아닌 임시통행증을 이용해 중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정황이 관측됨. 최근 중국에서 일하다 돌아가는 북한노동자 가운데 여권이 아닌 다른 증명서를 갖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체류신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단둥 지역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이들 북한노동자들이 이른바 ‘도강증’이라고 불리는 ‘변경통행증’을 이용해 국경을 통과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2017. 10. 9.

■ FAO “북, 제재와 작황부진으로 식량조기경보15개국에”(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핵개발 강행으로 인한 국제사회 제재와 봄·가을 작황부진으로 식량사정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긴급 대응이 시급한 위기국가로 지목함.
- 식량농업기구는 지난 주말 공개한 ‘조기행동보고서’에서 국제사회의 엄격한 경제제재와 거듭되는 농업실적 부진으로 북한의 식량상황이 2017년 마지막 3개월 동안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함.
- 보고서는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의 극심한 가뭄이 가을 추수철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북한 곡물 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평안 남북도와 황해남도 그리고 남포시의 곡창지대가 최악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단함.
- 보고서는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 시험 강행으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를 받고 있으며 경제적 압박이 심해지면서 부족한 곡물을 외국으로부터 들여올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함.

2017. 10. 11.

■ **북 식량사정 현재는 안정세, 전망은 불투명(자유아시아방송)**

- 올해 농사작황을 놓고 북한 내부에서도 설왕설래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햇곡식이 나오면서 식량가격은 내렸지만 지역에 따라 농사작황이 너무 달라서 내년도 식량사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망함.
- 11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현재 회령시 장마당에서 입쌀은 kg 당 우리(북한) 돈 4천9백원, 강냉이는 햇곡식일 경우 kg당 1천2백원, 묵은 강냉이는 kg 당 1천5백 원으로 거래된다”며 “식량가격은 내려가는 추세”라고 말함.
- “함경북도 사람들은 흔히 가을철에 식량가격이 내리기를 기다리다가 한해 먹을 식량을 한꺼번에 다 사들인다”며 “그러나 올해는 앞으로 식량가격이 더 내리게 될지 아니면 오르게 될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한다”고 소식통은 덧붙임.

■ **UN “북, 아시아에서 재해에 가장 취약”(자유아시아방송)**

- 2000년 이후 북한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재해를 입었다고 유엔 기구가 분석함.
-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11일 발행한 ‘2017 아시아·태평양 재해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북한을 자연 재해 대비 능력이 가장 부실한 국가로 지목함.
- 이 보고서는 2000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북한이 경제 규모에 비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전함.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는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3.5%에 이룸.
-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와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만들어낸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임.

2017. 10. 12.

■ **북 해외 노동자, 관리자 목인하 외부영상 시청(자유아시아방송)**

-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외부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다는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의 평가가 나옴. 다양한 외부 정보를 습득한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 정보유입의 통로가 된다는 분석임.
-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현장 관리자의 목인 아래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외부 영상과 정보들을 접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나옴.

-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2일 서울에서 열린 ‘김정은 시대 북한인권실태’ 발표회에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시기, 파견 지역과 관련 없이 직·간접적으로 외부인을 접촉한다는 공통된 증언이 나온다”고 말함. 해외 파견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계기라는 설명임.
- 단체에 따르면 해외에 파견된 현장 관리직의 경우 현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일반 노동자들보다 외부 정보를 더 많이 습득할 수 있음. 다만 현장 관리직이나 해외 식당 종업원 등 외부인을 접촉해야만 하는 직군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 강도는 더욱 높다고 단체는 밝힘.

■ 북 고아수용시설은 철창 없는 감옥(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고아들을 돌본다며 각 도 소재지에 지어놓은 육아원과 중등학원이 철창없는 감옥으로 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교직원들에 의한 폭행은 물론이고 위생관리 상태도 엉망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함.
- 북한당국이 김정은 우상화 선전과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고아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밝힘. 실제로 고아수용시설인 육아원과 중등학원의 관리상태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고 소식통들은 한 목소리를 냄.
- 9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김정은이 집권한 후 전국각지에 건설한 육아원과 중등학원은 설계자체가 감옥처럼 구성됐다”며 “놀이시설과 식당, 교양실 건물들이 복도를 통해서 연결돼 있어 출입문만 봉쇄하면 누구도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어있다”고 말함.
- “각 건물마다 밖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안에서는 열수 없도록 자물쇠로 잠가 놓아 유일하게 출입할 수 있는 통로는 교직원들이 출퇴근하는 정문밖에 없다”며 “정문은 고아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경비가 삼엄하다”고 소식통은 덧붙임.
- 소식통은 “혜산중등학원의 경우 육아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숙사의 1층과 2층은 1살부터 4살까지의 고아들의 침실이 있고 7살 이상부터 17살까지의 청소년들은 3층에 침실이 있어 도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고 언급함.

2017. 10. 13.

■ 북한 기아, 전 세계 27번째로 심각...25년 전 비해 개선 안 돼(미국의소리)

-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세계 식량정책 연구소 IFPRI는 북한의 기아문제를 ‘심각한(serious)’ 상황으로 평가함.

- 이 연구소는 12일 아일랜드 비정부기구인 ‘컨선 월드와이드’, 독일의 민간 구호단체 ‘세계기아원조’와 공동으로 발표한 ‘2017 세계 기아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이 50점 만점에 28.2를 기록해 식량난이 ‘심각한’ 나라로 분류됐다고 밝힘. 전 세계 119개 나라 가운데 27번째로 기아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임.
- 0점은 기아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50점은 모든 국민이 굶주리는 ‘극도로 위험한 수준 (extremely alarming)’을 뜻해 점수가 높을수록 식량난이 심각한 것을 의미함.
-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2년 30.9를 기록했던 북한 기아지수는 2000년 40.4로 크게 증가해 ‘위험한 수준 (alarming)’으로 분류함. 당시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을 겪던 북한에서는 수 십만 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짐. 북한의 기아지수는 이후 2008년 30.7로 크게 떨어진 데 이어 올해 28.2로 추가 하락함.
- 세계 식량정책 연구소의 질 번스타인 연구원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북한의 기아 문제가 고난의 행군 시기였던 2000년 초기와 비교해서는 다소 개선됐지만,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해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10. 2.

■ 조명균 “이산가족 문제, 정치·군사와 분리”…北 호응 촉구(연합뉴스)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일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관계의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함.
-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이북5도청에서 열린 제36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금 남북관계 상황이 엄중하고 어렵지만,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하여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힘.
- 이어 “북한도 더 이상 이산가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이산가족 문제를 풀어나가는 길에 우리와 함께 나설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강조함.

2017. 10. 11.

■ 통일부, 北핵실험장 인근 지역 탈북민 대상 연내 피폭검사(연합뉴스)

- 통일부가 북한 핵실험장이 위치한 함경북도 길주군 출신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 피폭검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국회 외교통일위 박병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밝힘.
-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통일부는 길주군 출신 탈북민 114명 중 희망자 30명을 대상으로 연내(12월까지) 건강검진을 하면서 방사량 노출 여부를 함께 가리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함.
 - 이번에 피폭검사를 받는 30명은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순서대로 검진 희망 여부를 물은 후 선정됐으며 암 검진과 갑상선 기능검사도 함께 받는다고 박 의원은 설명함.
 - 박 의원은 “이번 검사로 그간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주민 가운데 일부가 원인 모를 질병에 걸리는 등 방사능 피폭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문에 대한 진위도 가려질 전망”이라면서 “북한의 핵시설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들에 대한 피폭검사 및 건강검진이 조기에 이뤄져야 했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함.

2017. 10. 12.

■ 외교부 “北인권개선 위해 유엔과 함께 분명한 메시지 발신”(연합뉴스)

- 외교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하겠다”고 밝힘.
- 외교부는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의원들에게 배포한 업무현황 보고 자료에서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이는 매년 유엔 총회 및 유엔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추진되는 북한인권결의 채택 등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 2004~2005년 유엔 인권위원회와 2005년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내리 기권했던 정부는 2006년 찬성으로 돌아섰다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 다시 기권해 일관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그후 2008년부터 정부는 계속 찬성해옴.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10. 1.

■ 탈북자 가족, 보위성 조사 피하러 '신분세탁' 시도(자유아시아방송)

- 요즘 북한에서 고액의 뇌물만 바치면 신분세탁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최근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조사와 압박이 거세지면서 일부 탈북자 가족들이 뇌물을 써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신분세탁을 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힘.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25일 “최근 탈북자 가족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라는 인민보안성 지시가 각 도 보안국에 하달됐다”며 “자식이나 형제들 중 탈북자가 있음이 밝혀진 남은 가족들은 당국의 감시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큰돈을 들여 신분위조를 하고 있다”고 말함.
- 소식통은 “중앙의 지시로 시작된 이번 탈북자 조사는 과거처럼 단순히 감시자를 붙이거나 요직 진출을 제한하던 정도를 벗어나 훨씬 가혹하다”며 “가족 중 탈북자가 있으면 이유 불문하고 보위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처벌 받게 된다”고 지적함.

2017. 10. 3.

■ 올해 1~8월 입국 탈북민 780명…작년비 12.7% 감소(연합뉴스)

- 올해 1~8월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780명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12.7% 감소했다고 통일부가 3일 밝힘. 2011년 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시작된 탈북민 감소 추세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음.
- 탈북민 입국 규모는 2009년 2천914명, 2010년 2천402명, 2011년 2천706명 등으로 한때 연간 3천 명에 육박했지만, 2012년 1천502명으로 급감한 이후에는 매년 1천200~1천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탈북민 감소는 북한의 통제 강화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체제 유지를 위해 국경 지역에서 강력한 탈북 단속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짐.
- 특히 2015년 말부터는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탈북 방지용 고압전선이 설치되고 탈북 시도를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단속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으로 전해짐.

■ 美 입국 탈북난민 올해 12명…2월 이후 전혀 없어(연합뉴스)

-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미국에 입국한 탈북난민은 12명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함.

- VOA는 미 국무부 난민 입국현황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미국의 2017 회계연도 중에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모두 12명으로 집계됐다”라며 “2014 회계연도 8명, 2006년 회계연도 9명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 수치”라고 전함.
- 이 기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 12명 가운데 여성이 9명이고 남성은 3명으로 나타남.

2017. 10. 7.

■美 의회보고서 “탈북민 송환 연루 中 정부·개인 제재해야”(연합뉴스)

- 미 의회 산하 위원회가 탈북민 송환에 연루된 중국 정부 부처와 개인을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함.
- VOA에 따르면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지난 5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제재와 함께 미 의회와 행정부가 중국 당국에 탈북민 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라고 제안함.
- 또 위원회는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중국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고 하며 북한인들을 고용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필요성을 강조함.

2017. 10. 9.

■‘北의 국군포로·납북자 인권침해’ 내년 본격 조사(연합뉴스)

- 통일부가 내년에 국군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에 대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함.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센터) 관계자는 9일 “국군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한 시범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며 “내년에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함.
- 시범조사를 통해 조사 방법이나 항목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지만, 국군포로와 납북자라는 이유로 북한에서 고문을 당했는지, 노동당 가입이나 직업 선택 등에 있어 차별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됨.
- 센터 관계자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본인이나 그들의 가족 중에서 탈북해 국내에 정착한 분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2017. 10. 10.

■ **내년 미국 난민 탈북자 쿼터 대폭 축소(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정부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미국이 수용할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난민의 규모를 5천명으로 배정함. 미국 정부는 국적지의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박해를 받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껴 미국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해 정착할 기회를 주고 있음.
- 미국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난민은 미국 정부가 분류하는 개별 망명과 집단 망명, 그리고 가족이 미국에 있을 경우 입국을 우선 허용하는 가족 재결합 등 3가지 기준으로 난민 인정 심사를 받게 됨.
-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우려한다면서 200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북한 출신 난민의 미국 정착을 지원한다고 밝힘.
-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인 2016회계연도 동안 미국 정부가 난민으로 받아들인 탈북자는 모두 14명으로 이 기간 미국에 정착한 전체 난민 8만 5천여명의 0.02%에 그침.
- 미국에 정착하는 북한 난민의 수가 적은 이유는 탈북자의 대다수가 한국을 정착지로 희망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2017. 10. 11.

■ **통일부 “탈북자 75%, 함경북도·양강도 출신”(자유아시아방송)**

-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의 75퍼센트 이상이 강폭이 좁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접한 함경북도와 양강도 지역 출신이며, 이중 함경북도 출신이 60퍼센트로 나타남.
- 반면, 강폭이 넓고 물살이 빠른 압록강 북중 접경지역인 평안북도와 자강도 지역 출신 탈북자는 약 3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11일 지난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관련 한국 통일부 통계를 인용해 이 같이 밝히고,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인구 합계(약 400만)가 함경북도와 양강도 인구(약 300만 명)보다 100만 명 가량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형적 이유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전함.
- 매체는 또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지역 출신 탈북자가 북중 국경에 근접한 지역 출신보다 더 많은 현상도 보였다고 분석함. 14호 개천 수용소와 18호 북창 수용소가 있는 평안남도와 15호 요덕 수용소가 있는 함경남도 출신 탈북자

수(3,698)가 자강도와 평안북도 출신 탈북자(1,018)의 세 배에 달한다는 설명임.

- 평양 출신 탈북자(695명)가 국경지역인 자강도(207명)보다 세 배나 많고, 평양 출신 탈북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명 중 4~5명 꼴(남성 56%)로 전체 탈북자 중 여성의 비율 70퍼센트 이상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남.

2017. 10. 12.

■ **“트럼프 日 방문 때 남북피해자 가족 면담할 듯”...인권 압박 차원(연합뉴스)**

- 다음달 일본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납북된 일본인 가족들과 만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함.
- 요미우리는 복수의 미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북한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横田 めぐみ)의 부모를 비롯한 납치 피해자 가족과 면담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전함.
- 이는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 미일 연대 관계를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보임. 북한을 여행하던 중 억류됐다 풀려난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웬비어 사건 이후 미국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납북 피해자 가족 면담을 계기로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엿보임.

5. 대북지원

2017. 10. 2.

■ **유엔 1~9월 대북 지원금 목표액 30%도 못 미쳐(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이 올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에 약 1억달러를 책정했지만 1월부터 9월까지 모금은 약 30%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남.
-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지원금 현황을 집계하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자금 모금 현황 웹사이트에 따르면 2일 현재 대북 지원액은 약 3천300만달러(3천329만2686달러)로 나타남.
- 올해 필요한 대북 지원 예산 1억1천350만 달러의 약 30%(29.3%)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임. 자금 모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대북 사업에는 유엔의 국제구호기금(CERF), 세계식량계획(WFP)과 7개국 등이 지원함.

- 7개국은 스위스(\$5,020,080), 러시아(\$3,000,000), 캐나다(\$1,486,989), 스웨덴, 즉 스웨리에(\$1,119,112), 미국(\$1,000,000), 프랑스(\$494,056), 그리고 리히텐슈타인(\$105,708) 등임.
- 이중 국제구호기금(CERF)이 약1천230만달러로 전체 가장 많은 지원을 했고, 전체 대북 지원의 무려 37.1%를 차지함. 이어 스위스가 약 500만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대북 지원의 15.1%를 차지함.

2017. 10. 10.

■ 美 대북지원단체, 北에 의약품 2천만달러어치 지원(연합뉴스)

- 재미교포들이 주축이 된 대북지원 민간단체가 최근 북한에 어린이용 항생제를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에 있는 대북지원 민간단체 ‘겨레사랑’은 최근 어린이용 항생제 등 의약품 2천만 달러어치를 북한 양강도 인민병원에 보냈다고 대북 소식통이 10일 밝힘.
- 겨레사랑은 기독교계 대북지원 단체로, 북한에 진료소를 세우고 의약품을 공급하는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옴.
- 북한에 지원한 의약품은 이 단체가 모금한 기금으로 구매한 것과 제약회사에서 기증한 것임.

2017. 10. 11.

■ 덴마크적십자사 “북한 관계자, 대북 제재로 인한 어려움 호소”(미국의소리)

- 북한 적십자 소속 관리들이 국제적십자사 관계자들과 만나 대북 제재에 따른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함.
- 지난 3일 덴마크에서 열린 대북사업 회의에 참석한 북한 관리들이 대북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덴마크 적십자사의 버기트 비쇼프 엡슨 국장이 밝힘.
- 엡슨 국장은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회의에 조선적십자회 관계자 등 북한 대표 4명이 참석했다며, 이들은 지원 물자 획득 등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상세히 전했다고 밝힘.
- 이어 제재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조선 적십자사가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함.
- 제재가 대북 지원사업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시점에서 대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마련했다는 설명임.

2017. 10. 11.

■ **대북 원조 있으면 간접적 혜택이라도 주민에게 돌아가(연합뉴스)**

- 북한에 대한 원조가 주민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더라도, 시장으로의 물자 유입 등을 통해 간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옴.
-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산하 ‘북한 유엔권고 이행 감시기구’의 송한나 연구원은 이 센터가 1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17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세미나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함.
- 탈북민 면접조사 등을 토대로 한 ‘북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도덕적 딜레마’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송 연구원은 “(북한의 원조 배분 방식은) 고위층이 원조 물품을 시장에 유통하면 일반 주민들은 시장에서 이렇게 유통되는 상품을 구매하는 식”이라고 설명함.
- 이어 ‘원조가 주민에게 직접 도달되지 않는 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북 지원과 관련된 논쟁에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원조가 있으면 간접적인 혜택이라도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함.

2017. 10. 13.

■ **미 지원단체, 17일 방북...미 여행금지 예외 적용(미국의소리)**

- 미국의 구호단체가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함. 국무부로부터 방북 허가를 받는 데 2주에서 6주가 걸린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오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19일간 북한을 방문하기로 함. 지난 8월 15일부터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8월 31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데 이어 올 들어 네 번째 방북임.
- 이 단체 관계자는 11일 ‘VOA’에 미국 시민권자 10명을 포함해 총 14명이 방북한다며, 방북을 신청한 미국 시민권자 모두 국무부로부터 방북 승인을 받았다고 밝힘. 그러면서 방북 신청서를 제출하고 특별 여권을 받기까지 5주에서 6주가 걸렸다고 밝힘.
- 이들은 이 단체가 지원하는 결핵과 간염 병원 25~30곳을 방문해 지원 물자가

- 제대로 도착해 분배됐는지 확인할 예정임. 또 이들 병원의 수도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추가 수도 시설을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음.
- 또 다른 미국의 구호단체인 ‘미국친우봉사회 (AFSC)’도 12일 ‘VOA’에 이날 미국 정부로부터 10월 방북을 위한 승인을 받았다고 밝힘.